



노동시장 유연화, 만능 열쇠가 될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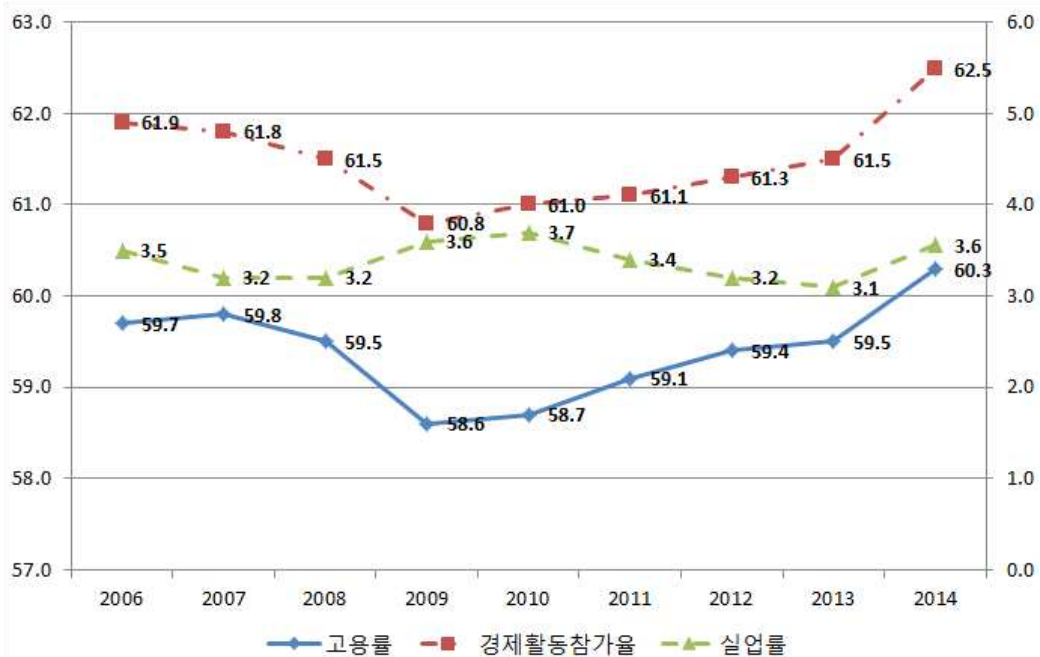
2015.01.15 | 김수현_새사연 연구원 | sida7@saesayon.org

새사연은 2008년부터 매 년 진보 정책 연구소 최초로 <전망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경제, 주거, 노동,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세계의 흐름 속에서 한국 사회를 진단하여 사회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고 새로운 사회로의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015년 전망 보고서 역시 총 8회에 걸쳐 연재됩니다.

2014년 노동시장 동향

2014년에도 역시 고용지표 개선이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1월에서 11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14년 평균 취업자 수는 2,561만 9천 명으로 전년동기에 비

그림1. 연도별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단위 : %)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은 좌측 축, 실업률은 우측 축을 참조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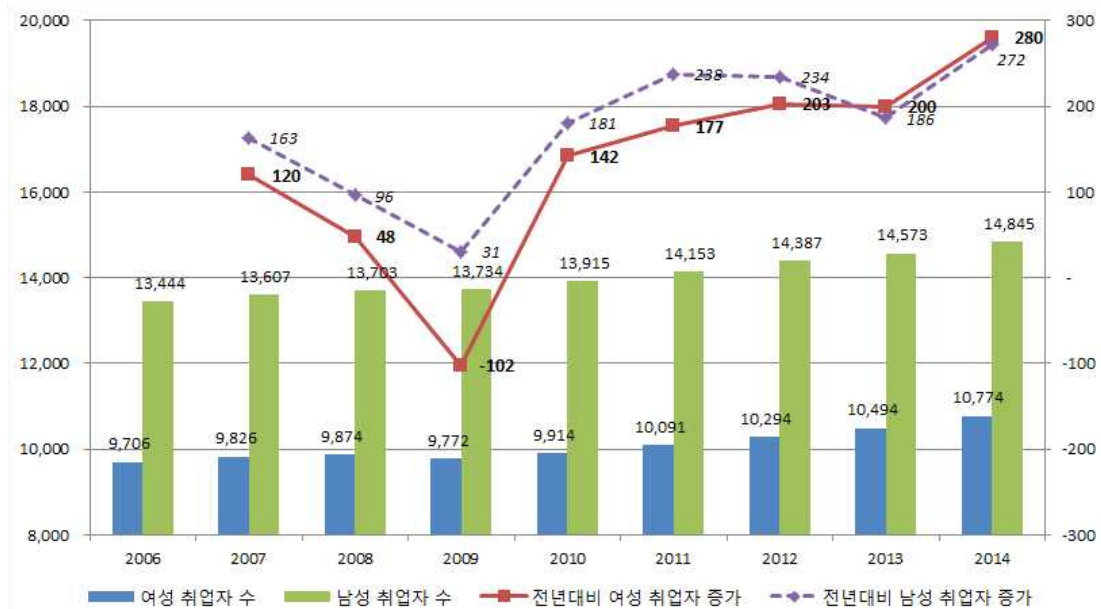
※ 2014년의 경우 1월에서 11월 사이 값의 평균치임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 해주세요.

해 월평균 54만 3천 명이 늘어났고,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 모두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14년 1월에서 11월까지의 평균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은 각각 60.3%, 62.5%, 3.6%로 2013년 평균과 비교해 고용률은 0.8%p, 경제활동참가율은 1.0%p, 실업률은 0.5%p 상승했다.

고용지표 개선이 이어질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여성 취업자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2012년 이후 여성 취업자 수는 매년 평균 20만 명 이상 늘어나고 있는데, 2014년 여성 취업자 수는 1,077만 4천 명으로 2013년에 비해 28만 명이나 증가했다. 동기간 남성 취업자 수 증가는 27만 2천 명이었는데, 취업자 증가율로 환산하면 여성 취업자의 경우 2013년에 비해 2.6%가 증가하였고, 남성 취업자는 1.9%가 증가한 것에 해당된다. 이런 여성 취업자 수의 빠른 증가와 함께 고용률도 빠르게 상승했는데, 2014년 1월에서 11월까지의 평균 고용률은 49.6%로 2013년 평균 고용률 48.8%에 비해 0.8%p 상승하였다.

그림2. 성별 취업자 추이 (단위 :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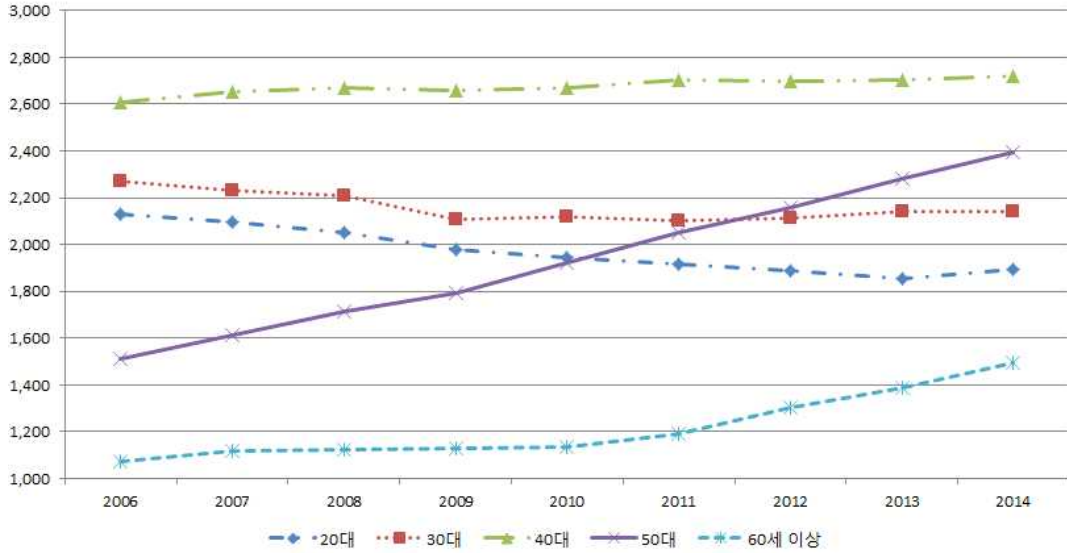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취업자 수는 좌측 축, 전년대비 취업자 증가는 우측 축을 참조할 것

※ 2014년의 경우 1월에서 11월 사이 값의 평균치임

이런 여성 취업자 수 증가에는 여성 고용률 제고를 위한 정부 정책이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최근 정부는 기존의 육아 및 보육지원 정책과 함께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확대를 추진해왔다. 정부는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확대를 통해 여성으로 하여금 일과 가정의 양립을 가능하게 하여 경력단절은 줄이고, 고용률은 증대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림3. 연령대별 여성 취업자 수 추이 (단위 : 천 명)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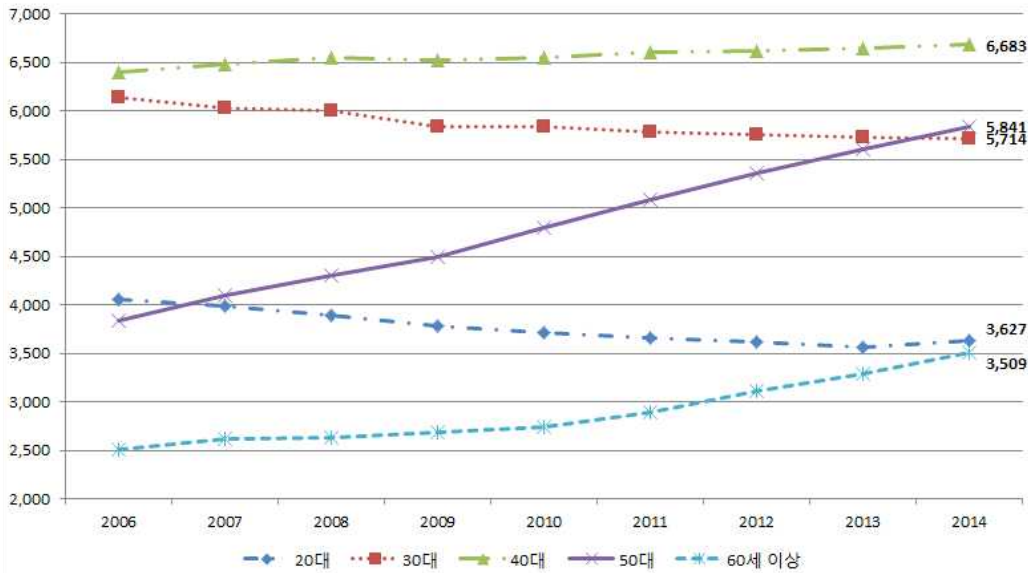
※ 2014년의 경우 1월에서 11월 사이 값의 평균치임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취지와는 다른 형태로 여성 취업자 수는 늘어나고 있다. 정부가 이야기 한 시간제 일자리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경력단절은 지속되고, 오히려 중고령층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여성 취업자 수 증가를 연령별로 구분해 보면 50세 이상 중고령층 여성 취업자가 노동시장 내 크게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시간제 일자리를 포함한 중고령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들이 늘어나면서 최근 노동시장 내 일자리들의 질적 수준을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와 같은 중고령층 노동자의 증가는 여성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중고령층 노동자의 증가는 2014년의 취업자 수 증가에 있어 여성 취업자 수 증가와 함께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꼽을 수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다른 연령대 취업자 수는 그 증가세가 둔화되거나 감소 양상을 보인 반면, 50세 이상 중고령층 취업자의 수는 꾸준히 증가세를 이어왔으며, 최근에는 전체 취업자 수 증대를 견인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14년 현재 50대 취업자 수는 584만 1천 명으로 40대 다음으로 가장 많았으며,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350만 9천 명으로 아직까지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는 적지만 20대 청년층 취업자 수에 근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4년에도 이러한 중고령층 취업자 수의 빠른 증가는 계속되었으며, 전체 취업자 수의 증가를 이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4. 연령대별 취업자 수 추이 (단위 : 천 명)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2014년의 경우 1월에서 11월 사이 값의 평균치임

산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과 제조업이 고용증대를 이끌었다. 2014년 1월부터 11월까지의 취업자 수 평균과 2013년 취업자 수를 비교해보면, 제조업이 13만 9천 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13만 7천 명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기 직후 400만 명 미만으로 줄어들었던 제조업 취업자 수는 이후 수출 증대와 함께 빠른 회복세를 보였는데, 2014년 들어 과거에 비해 큰 증가폭을 보이며 전체 취업자 수 증대를 이끌었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민간의 사회서비스업 수요 증대와 함께 금융위기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취업자 수가 증가되어 온 산업으로, 2006년 11월 70만 2천 명에서 2014년 11월 177만 4천 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다른 산업의 취업자 수 증가를 훨씬 뛰어넘는 수치이다. 2014년에도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취업자 수 증대는 지속되었는데, 앞으로도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대와 함께 취업자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반면, 농업, 임업 및 어업과 금융 및 보험업의 취업자 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 임업 및 어업은 1차 산업으로 최근 몇 년 동안 지속적인 취업자 수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 2014년 1월에서 11월까지의 평균을 기준으로 2013년과 비교했을 때 3만 3천 명의 취업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는 FTA 확대에 따른 농축산물 수입 증대로 인한 취업자 수 감소도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 및 보험업의 취업자 수는 2014년 1월에서 11월까지의 평균과 2013년을 비교했을 때 2만 4천 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해당 산업의 경기불황으로 인한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표1. 산업별 취업자 수 추이 (단위 : 천 명)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4년 증감
농업, 임업 및 어업	1,542	1,528	1,520	1,487	-33
광업	17	15	16	14	-2
제조업	4,091	4,105	4,184	4,323	139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76	76	90	82	-8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	71	73	73	87	14
건설업	1,751	1,773	1,754	1,792	38
도매 및 소매업	3,638	3,689	3,660	3,785	125
운수업	1,332	1,380	1,413	1,407	-6
숙박 및 음식점업	1,854	1,906	1,971	2,091	12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703	700	692	713	21
금융 및 보험업	846	842	864	840	-24
부동산업 및 임대업	486	486	485	508	2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961	1,028	1,022	1,024	2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086	1,116	1,173	1,178	5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951	951	966	965	-1
교육 서비스업	1,686	1,744	1,748	1,806	5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311	1,399	1,554	1,691	137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417	409	392	392	0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261	1,286	1,312	1,303	-9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153	166	172	117	-55
국제 및 외국기관	13	9	7	14	7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2014년의 경우 1월에서 11월 사이 값의 평균치임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4년 들어 전년동기에 비해 월평균 54만 3천 명의 취업자가 증가하고,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이 상승하는 등 고용지표가 빠르게 개선될 수 있었던 주요한 이유는 첫째, 여성 취업자 수가 빠르게 증가했고, 노동시장에 참가하는 중고령 노동자의 규모가 확대되었으며, 제조업과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 수가 늘어났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이런 각 요인들은 독립적으로 혹은 함께 2014년의 주요 고용지표를 개선시키는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015년의 노동시장

2014년 노동시장 동향은 수치상으로는 확실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취업자 수나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모두 2012년이나 2013년에 비해 나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보다도 고용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확인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노동시장의 상황이 나아졌다는 것을 체감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는 무엇 때문일까?

아마도 가장 큰 이유는 노동시장의 양적 측면을 반영하는 주요 지표들이 나아진 것으로 나타난 반면, 질적 측면에서의 개선은 크지 않거나 오히려 나빠졌을 수도 있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질적 측면 악화에 대한 우려는 2014년의 취업자 증가 양상과도 깊은 관계가 있는데, 이는 2014년 취업자 증가를 이끈 것이 여성과 중고령 취업자의 증가라는 점 때문이다. 여성과 중고령자 모두 노동시장 내에서 임금이 낮고, 비정규직의 비중이 큰 계층으로 분류되는데, 이런 여성과 중고령 취업자의 증가가 일자리의 질적 개선을 동반하지 않을 경우 고용의 양적 측면 확대에는 기여했을지 몰라도, 노동시장 내 일자리 질적 수준에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여성과 중고령이란 특성을 함께 가진 여성 중고령 노동자의 증가는 이와 같은 우려를 보다 심각하게 한다.

그림5. 성별 연령대별 임금근로자의 월임금 및 비정규직 비율 (단위 : 만원, %)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4년 8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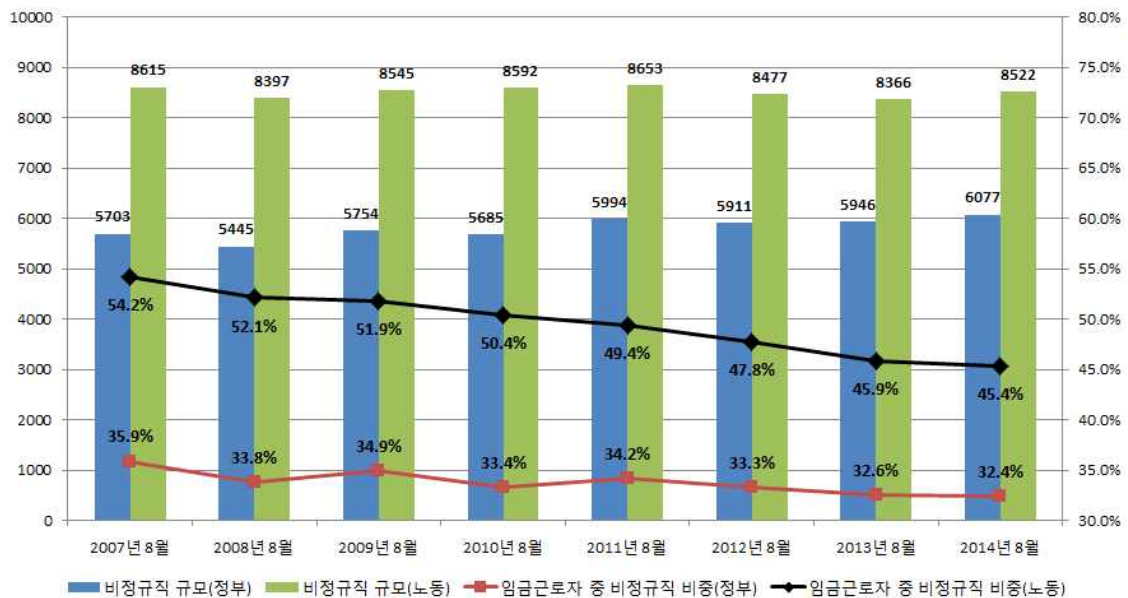
※ 월평균 임금은 좌측 축, 비정규직 비율은 우측 축을 참조할 것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정책도 이러한 우려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나 생각된다. 현재 정부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확대시키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이러한 일자리 정책이 여성과 중고령자의 취업자 수를 증가시켜, 수치상의 고용지표를 개선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낮고, 고용이 불안정한 시간제 일자리를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2015년에도 여성 일자리와 중고령 일자리에 대한 개선 없이 2014년처럼 이들의 취업자 수만 늘어난다면, 고용지표 상 수치로는 노동시장의 상황이 나아진 것으로 나타날지 몰라도, 고용의 질적 측면의 개선은 크게 없어 사람들은 계속해서 좋지 않은 노동시장 상황을 체감하게 될 수도 있다.

나아가 사람들로 하여금 노동시장의 상황이 개선된 것으로 인식하고, 그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일자리를 줄이는 한편, 비정규직 일자리에 대한 질적 수준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6. 비정규직 일자리의 규모 및 비중 (단위 : 천 명, %)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8월

※ 비정규직 일자리 규모는 좌측 축,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은 우측 축을 참조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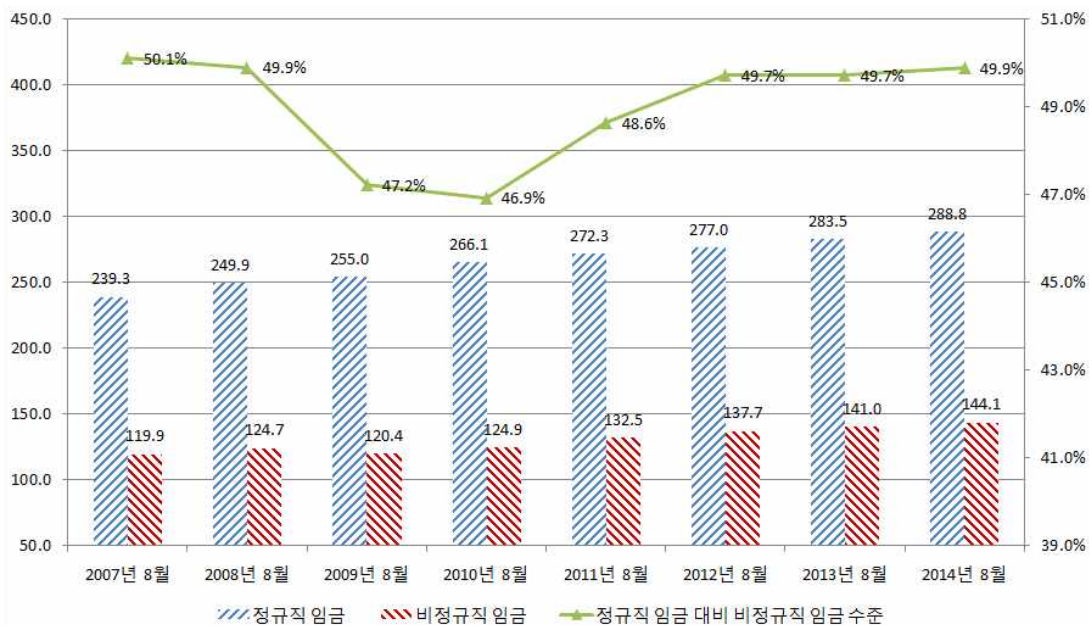
대표적인 좋지 않은 일자리로 꼽히는 비정규직 일자리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전체 임금근로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정부의 비정규직 통계나 노동계의 비정규직 통계 모두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¹⁾. 하지만 여전히 그 규모는 상당히 크며, 비중 역시 높은 수준이

1) 노동계와 정부의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개념은 “김유선 (2014)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한국노동

계속되고 있다. 노동계의 비정규직 개념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14년 8월 현재 임금 근로자 중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은 45.4%로 임금근로자의 절반에 가까운 이들이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문제는 이들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정규직 노동자들 사이의 임금이나 사회보험 지원 등에 있어 큰 격차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월평균 임금은 정규직 노동자의 절반 수준에 지나지 않으며, 사회보험료에 있어서도 정규직 노동자들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지원을 받고 있다. 이런 큰 격차,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높은 고용 불안정성과 저임금은 노동공급 측면에서의 차이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내에 존재하는 차별로 인한 결과이기도 한데, 여러 사회적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을 줄이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개선 없이 현 상황이 유지될 경우 노동시장의 질적 수준에 대한 우려 역시 계속될 것이다.

그림7.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 수준 비교 (단위 : 만 원, %)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4년 8월

※ 월평균 임금은 좌측 축,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수준은 우측 축을 참조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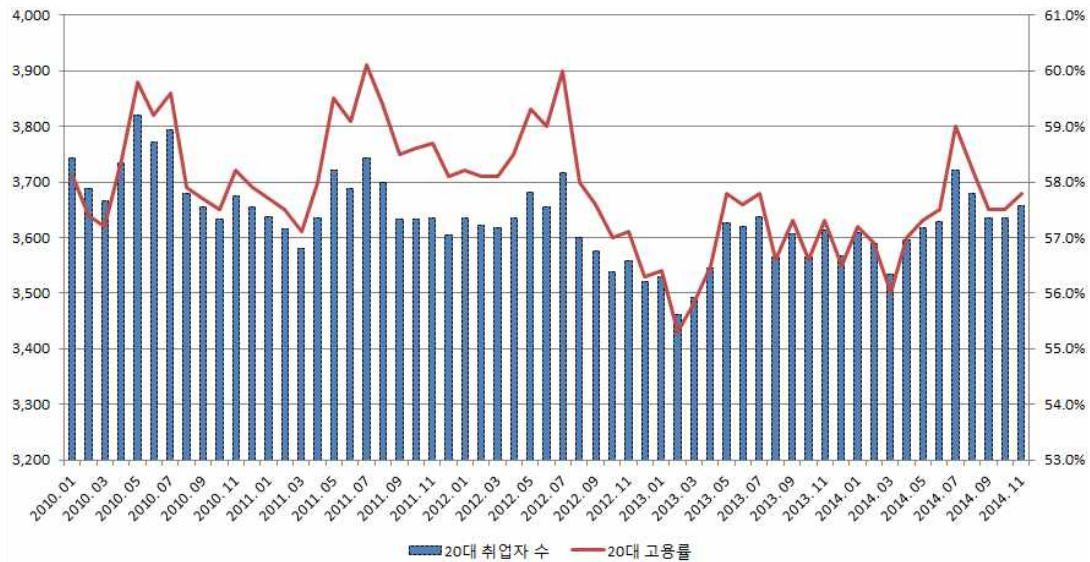
노동시장의 질적 측면 개선 없는 양적 확대의 경우를 우리는 이전 이명박 정부에서 본 바 있다. 금융위기 이후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과 함께 고용지표는 빠른 회복세를 보였고, 정부는 노동시장의 빠른 회복을 자축하며 언론에 정부 정책의 성공을 이야

사회연구소 이슈페이퍼 2014-22”를 참고

기했지만, 국민들의 노동시장 정책에 대한 평가는 좋지 않았다. 이는 노동시장의 질적 측면 개선 없는, 또는 오히려 노동시장의 질적 측면을 악화시키면서 이루어지는 노동시장의 양적 확대는 수치상으로는 성과로 나타날지 몰라도, 실제 국민들의 삶을 개선시키지는 못했기 때문이다. 그 시기 고용이 확대되고, 고용지표가 개선되는 가운데에도 불평등은 심화되었고, 빈곤의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의 수는 오히려 늘어났었다.

또한 2015년에도 경제적 침체가 지속되고²⁾, 경제적 불확실성이 계속된다면 노동시장의 질적 측면 개선이 없을 경우 청년고용문제의 해결도 제한된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2014년 들어 이전까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던 청년 취업자의 수는 감소 추세가 멈췄고, 고용률 역시 2013년에 비해 조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전히 청년층 취업자 수는 적고, 고용률 역시 낮아 청년고용문제가 해결되어가고 있다고 보기는 힘든 상황이다.

그림8. 20대 청년층 취업자 수 및 고용률 (단위 : 천 명, %)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취업자 수는 좌측 축, 고용률은 우측 축을 참조할 것

장기적인 차원에서 청년고용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야 한다. 즉, 생계를 유지하지 못해 비자발적으로 노동시장에 뛰어드는 것이 아닌, 청년들 스스로 자신들의 꿈을 위해,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 노동시장에 참가하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경제침체상태가 지속되고, 경제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 가운데,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노동시장의 질적 수준을 개선하

2) 정태인 (2015) '가상의 적' 앞세운 구조개혁의 속살, 새사연 2015년 전망보고서

는 정책적 노력도 없다면, 청년고용문제는 현 상황을 유지하거나, 양적 측면에서의 일시적인 수치적 개선만 이루어질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될 수 있을까?

정부는 경제성장과 노동시장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으로의 회귀를 택했다. 지난 12월 말 정부가 발표한 경제정책의 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 기업의 투자를 증대시켜 성장을 촉진하는 한편, 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안정성을 완화함으로써 정규직 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일자리에 대한 안정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으로의 회귀를 통해 성장과 현재 직면하고 있는 노동시장의 문제들을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과연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이 성장과 노동시장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우선,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이 기업의 투자를 확대시킬 수 있을까? 정부는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통해 기업의 비용을 절감시키고, 해고를 자유롭게 해 노동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증대시킨다는 방안으로 세우고 있을지 모르지만,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경제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이 정책은 오히려 기업으로 하여금 비용 절감을 통해 기존 이윤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자를 줄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경기침체가 이어지고 있고, 경제적 불확실성도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용에 대한 비용 감소가 고용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투자가 증가한다고 해도 노동시장 유연화의 결과로 불평등이 심화되고, 상대적으로 소비의 소득탄력성이 큰 소득 수준이 낮은 가구의 소득이 감소할 경우 결과적으로 소비의 감소로 인해 투자 증가의 효과가 상쇄되어 경제성장에 큰 영향을 못 미치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반하는 정책일 뿐만 아니라, 이전에 주장했던 내수중심의 성장 정책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노동시장 문제 역시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정부는 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고용안정성 완화가 정규직 고용 증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하지만, 비정규직 고용이 가능한 상황에서 이러한 정책이 정규직 고용증대로 이

어지기는 힘들 것으로 생각된다. 더 유연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해놓았고, 이후 더 쉽게 이들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기업이 지금보다 해고조건이 완화된다고 해서 정규직을 고용할 필요가 있을까?

기업이 자율적으로 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을 늘리는 경우는 새로운 산업의 성장이나, 경제가 다시 성장국면으로 진입하는 경우 또는 경제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경우로, 정부의 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안정성 완화는 정규직 고용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내기보다는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결과만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즉, 기업에게는 정규직을 더 쉽게 해고할 수 있고, 노동자들에게는 정규직이라고 해도 언제 해고될지 모를 위험이 더 커지는 결과만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정책에 대해 정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을 안정시키는 정책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 정부도 이 정책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성을 근본적으로 개선시키는 정책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비정규직 고용 유지를 제한하는 강력한 규제가 없을 경우 이 정책은 기업으로 하여금 2년 동안 고용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4년 동안 계속해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또는 2년 동안 언제든 해고당할 수 있는 비정규직 일자리를 4년 동안 언제든 해고당할 수 있는 비정규직 일자리로 바꾸는 정책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정부가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누구나 문제라고 생각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만든다면, 지금의 이와 같은 정책들보다는 기업으로 하여금 무분별하게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고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정부의 노동시장 유연화에 대한 비판하며 내놓았던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을 지키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글을 마치며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의 확대는 단기적으로 일자리 증가폭을 확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고용이 불안정하고,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일자리들의 확대는 한계 상황에 있는 보다 많은 사람들을 노동시장에 진입시킬 것이다. 물론 이 역시 정책적 성과의 하나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장기 경제성장이나 장기적인 차원에서의 노동시장 문제를 고려했을 때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 좋지 않은 일자리를 확대하기보다는 양질의 일자리 확대에 보다

집중하는 것이 더 좋은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고용이 안정된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시키는 정책은 당장 늘어나는 일자리 개수는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통한 성과에는 못 미치겠지만, 기업과 노동자 모두로 하여금 더 높은 속련에 투자하도록 해 생산성을 증진시키는 한편, 일을 통한 안정적인 삶을 바탕으로 노동자들의 소비를 확대시키는 작용을 해 경제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의 노동시장 구조는 변화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대부분의 국민들은 동의할 것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 “어떻게 바꿔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반드시 더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이 문제에 대해 일방적인 수용을 강요할 경우 소통의 부재라는 현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더욱 공고화될 것이며, 정책의 시행에 있어서도 저항으로 인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은 분명하다.

2015년에는 사건, 사고의 기억보다는, 국민의 삶을 결정지을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과 소통하는 정부에 대한 기억이 남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2015 새사연 전망 보고서 목록

날짜	분야	제목	작성자
1월 8일	한국경제(1)	'가상의 적' 앞세운 구조개혁의 속살	정태인
1월 12일	세계경제	약 엔, 강 위안, '슈퍼 달러'의 시대 도래?	박형준
1월 15일	노동·고용	노동 시장 유연화, 만능 열쇠가 될 수 있을까?	김수현
1월 19일	산업정책	추후 공개	이상동
1월 22일	주거정책	추후 공개	강세진
1월 26일	복지정책	추후 공개	이은경
1월 29일	돌봄정책	추후 공개	최정은
2월 2일	종합	추후 공개	새사연